

데이터베이스산업 진흥을 위한 법정기구 설립

Establishment of Legal Institution for the database industry Promotion



신각철

법제처 법제연구관

Shin, kak-chul.

Legislation, Legislative

Research Officer.

이 글은 필자의 소속기관과 무관한 개인 의견임을 밝히는 바이다.

- 필자주 -

☐ 정부출연기관의 역할

한동안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개편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바 있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서로 업무가 비슷하고 연구실적 등이 부진하여 예산낭비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출연기관의 업적이 우리나라 산업·경제와 문화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과학기술원」은 1970년 8월에 과학기술 분야에 관한 심오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자를 양성하

“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주체를 법적
기구화하고 예산지원 및 기능,
역할에 대한 뒷받침이
필요하다.

”

기 위하여 과학원(현재 과학기술원)을 설립하였다. 그동안 많은 고급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여 여기서 배출된 박사·석사 기타 기술인력이 우리나라 산업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정보화추진기구로서 「한국전산원」의 업무성과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한국전산원은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제13조)하여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전산망 개발과 기술의 표준화, 국가기관등의 전산화 촉진 및 국가기간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에 커다란 공헌

을 하고 있다. 국가기관전산망사업의 추진과 앞으로 초고속 통신망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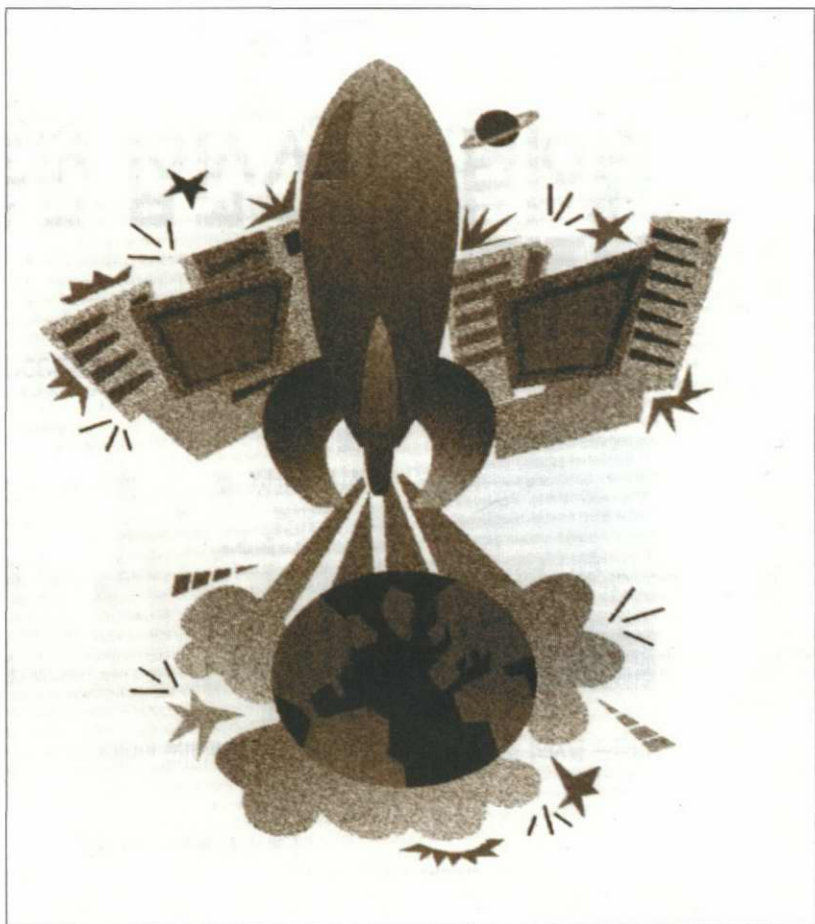
이와 같이 범국가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전문 추진주체를 법적 기구로 설립하고, 예산지원과 함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뒷받침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 정보통신분야 개방화에 대응체계 마련

앞으로 정보통신분야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UR 협정에 따라 미국등 외국의 개방요구를 전면 수용함에 따라 국제 경쟁시대를 맞게 되었으며, 국내의 대기업들이 모두 컴퓨터통신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春秋全國時代)를 맞게 되었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삼성, 현대, LG, 한화그룹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PC통신, 인터넷 등 컴퓨터통신사업에 일제히 참여하여 연내에 시범서비스를 하고 명년('96년) 상반기에 상용화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한다(중앙일보 '95. 7. 9).

이와 같이 대기업들이 컴퓨터통신망에 일제히 참여할 경우, 정보통신산업을 투자규모가 거대한 재벌들이 주도하게 되고 재벌들



의 생리를 보아 공공성이 퇴색되고, 국민일반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보다는 지나치게 상업주의로 흐를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보통신산업분야의 급격한 개방 및 민영화의 추진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정부의 체계적인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통신관련 기술체계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등의 표준화, 규격화의 실현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또한 자칫 잘못하면 미국, 일본 등 정보통신분야 기술선진국들의 기술체

계를 그대로 받아들여 기술종속의 가능성이 높다. 통신기술시스템, 데이터베이스소프트등 정보시스템 전반의 종속은 곧 통신주권, 나아가 정보주권의 상실을 의미하는 새로운 형태의 통신식민지관계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한겨레신문 '95. 7. 11).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경험한 바 있고 크게 당황하기도 하였다. 지난 '93년 2월에 발생한 「청와대 사칭 컴퓨터 사기사건」을 들수 있다.

컴퓨터전문가 김○○군(23세)

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을 사칭하여 국내 12개 금융기관 및 정보통신 기관으로 부터 금융전산망관련 자료를 빼내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었다('93. 2. 18 동아일보). 이 사건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이 외부에 노출된 까닭은 우리나라에서 금융전산망시스템을 자체개발하지 않고 미국의 기술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였기 때문에 미국컴퓨터자료를 연구하여 해커행위가 가능했다는 지적이었다.

이와 같이 기술체계 및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가 외국에 의존할 경우는 정보주권의 상실은 물론 시스템의 보안등 안전관리에 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지나친 상업성으로 정보통신의 공공성이 먼저 흔들리게 된다. 국적불명의 데이터가 홍수처럼 밀려오고, 음란·퇴폐등 불건전정보가 청소년 학생들의 공부방에 침투할 수도 있다.

1978년 프랑스에서 텔레마테크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정보우산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보주권의 상실은 곧 문화적 연속을 의미하며 이는 독립국가임을 포기한 것과 같다」라고 밝힌바 있다.

정보통신분야에서 정부의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개방확대되었을 경우의 문제점을 앞에서 제시한 것 이외 다른 측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복·과잉투자문제, 중

소업자의 기반상실, 과당경쟁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진흥원」(가칭)과 같은 민간차원의 법정기구(법정법인)를 설립하여, 정보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적절한 자율규제와 표준화등을 통하여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이용의 효율성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진흥원(가칭)의 주요업무

-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등 표준화 추진

미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EU여러나라는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오래전부터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며, ISO등 국제 표준화 기구가 탄생하여 국제적인 표준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는 곧 데이터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즉 이용의 편리성 다른 데이터베이스와의 호환성 등 표준화체계가 확립되어야 가능하다. 최근의 일본에 정보화추진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데이터베이스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미 통신기술체계, 데이터베이스소프트등이 표준화

가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자기나름대로 개발할 경우 중복투자는 물론 정보이용의 복잡과 시스템의 안전성 결여 등 혼란으로 엄청난 국력소모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진흥원이 주체가 되어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국제표준화 기구와 협력하여 국제수준의 표준화기준을 모든 데이터베이스 사업자들이 준수하도록 지도 권고하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테스트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은 정보의 유용성, 최신성, 신뢰성 그리고 건전성에 두고있다. 개인·기업 등 정보이용자가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로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은 ① 국가기밀(국가적 법익), ② 사생활비밀(개인적 법익), ③ 미풍양속등(사회적 법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즉 국가·사회·개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건전한 정보이어야 한다. 앞으로 국내외 시장개방으로 특히 외국의 데이터베이스 사업자가 지나치게 상업성에 치우쳐 음란·외설등의 정보(현재 인터넷정보의 음란 문제로 미국에서 조차 음란정보규제법이 제정추진되고 있음)가 무분별하게 청소년의 공부방으로

침투될 때 청소년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물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심사·규제하겠지만, 위원회의 업무는 한계가 있다. 진흥원에서는 유통정보에 대한 심사가 아니라 유통의 전단계 즉 데이터베이스의 설계·제작단계에서 부터 정해진 품질기준을 준수하도록 지도·권장하는 기능을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불건전정보를 막아낼 수 있다.

- 기타 전문인력양성, 데이터베이스 등록, 분쟁조정등

그 밖에 진흥원에서 하여야 할 주요업무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는 데이터베이스소프트웨어의 표준화와도 직결된다. 시스템표준화 기술을 교육 받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보입력, 정보검색 전문요원도 양성이 시급하다. 종래와 같이 OA기술이 아닌 멀티미디어, 초고속통신망시대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설계·제작 및 검색등 이용기술자를 양성해야 한다.

데이터베이스등록 역시 중요한 업무이다. 현재 법적으로 데이터베이스등록업무를 명백하게 설정하지 않고있다. 편집저작물(저작

권법 6조)로서 등록할 경우 문화체육부에, 프로그램으로 등록할 경우(프로그램법) 정보통신부에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등록의 필요성은 ① 창작사실의 명확화, ② 중복개발등 조정 ③ 제3자에 대항요건등의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④ 데이터베이스산업현황을 파악하여 재정지원 및 세제상의 우대조치 등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통합관리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현행 저작권법상의 개념정의는 매우 기초적·원시적인 개념에 불과하다. 논문·수치·도형·기타 자료의 집합물로서 이를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것을 편집물로 포함시키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정의로 해석하고 있다(저작권법 제6조).

이러한 정의는 매우 좁은 의미로서의 개념이다. 오늘날 멀티미디어, 초고속정보통신망 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크게 확대되어 넓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앞에서 처럼 문자·수치·도형 뿐만 아니라 음성·영상 기타 디지털화하여 전송될 수 있는 모든 정보의 집합물을 데이터베이스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법상으로 본다면 백과사전과 같이 단순한 편집저

작물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예시되고 있는 저작물(저작권법 4조) 거의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물이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① 논문목록 데이터베이스는 어문저작물이고 ② 음성·화상이 동시에 축적되었을 경우 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이 될 것이며, ③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저작물이 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적(靜的) 개념에서 볼 것이 아니라, 동적(動的)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정적으로 볼때에는 백과사전등을 CD-ROM에 수록한 것에 불과하다. 동적으로 볼때는 모든정보가 디지털화하여 컴퓨터통신망에 전송되고 단말기에서 이용하는 일체의 시스템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정보의 수집·입력·처리에서 전송을 거쳐 검색·이용하는 과정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개념을 확대하고 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데이터베이스는 정보통신부에서 관장하게 된다. 단순한 편집저작물로서 협의의 개념일 경우는 문화체육부 소관이 된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부처관장 업무를 떠나 통합관리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다음에 상세히 고찰하겠지만 이미 좁은 의미로서 산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기관은 「산업기술정보원법」(’91. 1. 4)을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입법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 없지 않다.

☐ 법정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실태

국가의 중요 정책과제를 효율적으로 연구·추진하기 위하여 법정법인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법정법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 경제·산업분야 연구원 입법례

그 밖에 특수법정법인 설립에 관한 입법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모두 열거할 수 없다. 한국과학기술원법(과학기술처), 한국국방연구원법(국방부), 한국노동교육원법(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법(노동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육성법(농림수산부), 한국법제연구원법(법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보건복지부),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교육부), 한국행정연구원법(총무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법무부), 통신개발연구원법(정보통신부) 등 각 부처마다 보통 2~3개의 연구기관을 설치하고 있다.

그 밖에 각 단행법에 설치된 정부출연기관을 들 수 있다. 예컨대, 공업발전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전산방법에 의한 한국전산원, 학술진흥법에 의한 학술진흥원,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보호원등등 법정기구로서의 정부출연기관이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는 지적에 따라 한동안 통폐합의 논의가 있었다.

☐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제작에 관한 입법례 검토

여기서 특히 주의를 요하는 입

법례를 찾아 볼 수 있다.

앞의 표에서 제시한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의 목적과 주요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설립목적은 바로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과 운영에 있다. 이 법률의 제1조 목적규정에서 「산업기술정보원을 설립하여 국·내외의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보급하고 산업간 및 지역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7조(사업)에서 ① 산업기술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② 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연구 및 기술개발, ③ 다만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의 표준화는 제외시키고 있으며, ④ 정보처리서비스제공, ⑤ 산업기술정보

법률명칭	주요사업개요	주관부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법 (1989. 12. 21제정)	· 국제 경제정책 관련문제 연구 · 주요 경제권역의 경제동향 정책연구	재정경제원
● 한국개발연구원법 (91. 12. 27)	· 국민경제 발전 연구 · 중장기 경제예측등 · 경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사업	"
● 한국조세연구원법 (91. 12. 27)	· 조세정책 수단의 개발연구 · 조세제도, 행정개선연구 · 조세수입 연계방법 연구	"
● 산업연구원법 (81. 12. 31)	· 국내외 산업·무역 · 기술과 국제경제전반 연구 · 기업경영·기술혁신에너지 합리화 연구	통상산업부
● 산업기술정보원법 (91. 1. 14)	· 산업무역 및 산업기술정보의 수집·처리·관리등 데이터베이스 제작 · 정보의 처리·관리 및 보급에 관한 표준화연구 및 기술개발	"

망 및 지역정보보급체계의 구축, ⑥ 정보의 이용촉진을 위한 계몽 및 인력양성 ⑦ 국내 데이터베이스 목록의 작성보급, ⑧ 정보수요 조사 및 분석, ⑨ 정부의 정보정책에 관한 자문 및 건의 등 실제로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진흥원」(가칭)에서 추진해야 할 업무를 이미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에서 관장하고 있다.

물론 앞의 ③에서 밝힌바와 같이 전기통신기술과 전산망 이용기술의 표준화는 제외시키고 있지만 실제로 ④, ⑤, ⑥등에서와 같이 정보처리서비스 제공, 지역정보망 구축 등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산망법의 영역에 속한다. 문제는 「산업기술정보」에 한정시키고 있으나 학술·문화 등 일반정보의 경우도 산업기술에 이용될 경우는 산업기술정보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데이터베이스진흥원을 법정기구로 할 경우 입법과정에서 서로 상치되지 않도록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조정할 필요가 있겠으나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연구 및 기술개발은 모든 정보를 포괄하여 관장하는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한다. 예컨대, 산업기술정보의 표준화는 통상산업부에서 농림수산정보를 농림수산부, 의료정보는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정보는 교육부 등에서 각각 표준화를 추진한다고 가정하면 표준화가 아니라

차별화 또는 개별화가 된다. 표준화는 국제기준에 합치되도록 단일기구에서 통합추진되어야 한다.

☞ 맺음말

지난 7월 13일 서울과 대전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 선도시험망이 개통되어 첨단정보통신 서비스에 들어갔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종전에 비하여 2,000배 늘어난다. 일반고속도로와 비교할 때 하루 100대의 자동차가 달릴 수 있던 도로가 20만대가 다닐 수 있게 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초고속정보통신망은 엄청난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고속망에서 필요로 하는 유용한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처리·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산업을 초고속망 추진과 함께 병합해서 육성·지원해야 한다. 자동차 없는 고속도로가 의미없듯이 정보(유용한)없는 초고속통신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고속통신망 추진사업 중 가장 핵심사업으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육성에 두고 법정기구 등의 설립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D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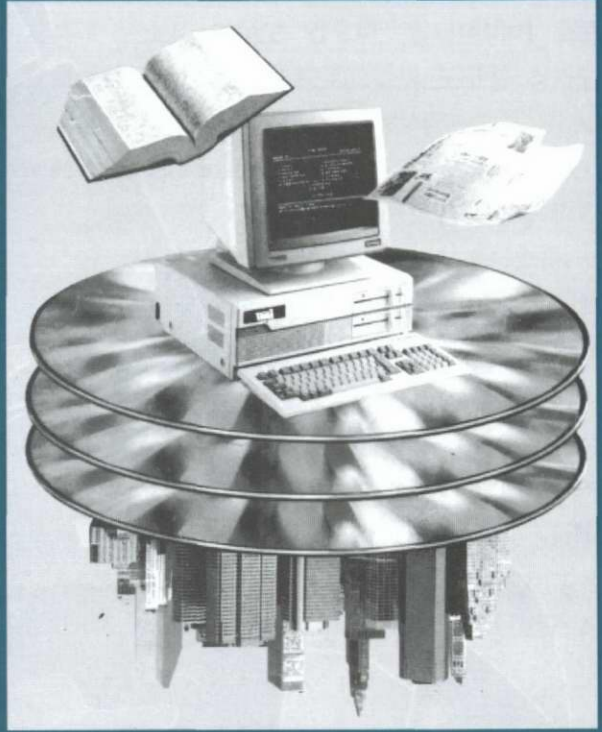


■ 멀티미디어

- 멀티미디어(Ⅲ) / 오해석

■ 인터넷

- 생활속에서의 인터넷 사용(Ⅲ) / 김양식



Multimedia

멀티미디어

